

한중일 협력의 역사

| 최희식_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 목차 |

1. 들어가며
2. 한중일 협력의 형성기(1999~2007년)
3. 한중일 협력의 제도화(2008~2012년)
4. 한중일 협력의 정체기(2013년~현재)
5. 나가며: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한중일 협력

한중일 협력의 역사

최희식_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1. 들어가며

근래 국제정치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소다자주의(minilateralism)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일본·호주 협력체제,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협력체제), 오커스(AUKUS, 호주·영국·미국 협력체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기후 위기처럼 국경을 넘나드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제적 혹은 지역적 대응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는 한때 국제정치의 주요 현상이었다. 하지만 많은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어려움이 컸기에 실질적 협력으로 진전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한편 양자주의(bilateralism)는 두 국가 간 힘의 비대칭성, 갈등 요인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두 국가의 협력만으로는 초국가적 문제에 대해 만족스러운 대응을 도출해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다자주의와 양자주의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소다자주의가 주목받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한미일 협력체제와 한중일 협력체제라는 소다자주의가 존재한다. 한국과 일본이 패권 경쟁을 치르고 있는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모두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서 미중 전략경쟁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소다자주의로 여겨진다. 중국은 한미일 협력체제가 대(對)중국 포위망을 강화한다고 판단하기에, 그 포위망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중일 협력체제의 이익을 인지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한미일 협력체제 강화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하면서도, 중국과의 안정적인 관계 유지를 위해 한중일 협력체제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한중일 협력은 한국과 일본 및 중국 모두에 매력적인 선택지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 규모는 2021년 기준 세계 경제의 약 25.4%를 차지했으며, 3국 간에 ‘돈’과 ‘사람’, ‘물건’의 왕래가 활발하기에 3국의 협력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밖에 없다.

한미일 협력은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의 연계성 강화라는 측면이 강한 만큼, 안보와 외교 협력에 주

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동맹 관계인 한국과 일본이 한중일 협력에서 외교 및 안보 협력을 추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 보면 한중일 협력은 안보와 외교 문제 등 민감한 ‘상위 정치(high politics)’ 문제보다는 경제, 에너지, 환경, 재난 재해, 문화·교류 등 ‘하위 정치(low politics)’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할 수 있다.

2. 한중일 협력의 형성기(1999~2007년)

한중일 협력을 상징하는 한중일 정상회담은 1999년에 개최된 제3차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오부치 게이조(小渊惠三) 수상의 제안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이후 2000년에 열린 2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으로 회담의 정기적 개최에 합의했고, 한중일 경제협력 공동 연구, 한중일 국민 교류의 해(2002년) 지정, IT 협력을 위한 국장급 전문가 그룹 설치, 환경 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합의했다. 2001년 3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한중일 비즈니스 포럼 결성, 경제장관 및 재무장관 회담의 정례화, 외무장관 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그때까지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환경, 문화·인적 교류 등 ‘하위 정치’ 문제 위주로 협의가 이뤄진 데 비해, 2002년 4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 주도로 북한 문제 등 외교적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02년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수상이 북한을 방문하여 평양선언에 합의했고 2차 북핵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였던 만큼, 일본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이용해서 대북 정책 공조를 도모하고자 했던 것이다. 동시에 한중일 FTA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2003년 5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무역과 투자, 정보통신, 환경, 재난 예방과 관리, 에너지 협력, 금융, 과학기술, 관광, 수산자원의 활용과 보존, 인적 교류, UN 역할 강화 및 개혁, 초국가적 범죄의 예방과 방지 등 14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3자 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실시하고 그 경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실행력을 담보하고자 했다. 또한 당시 유행하던 사스(SARS) 관련 보건 협력에 합의했다. 이후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등 보건 안보 협력은 한중일 협력의 주요 의제가 되었다.

2004년 6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14개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합의 및 보고된 〈행동 전략〉을 채택했다. 2005년 예정되었던 7차 한중일 정상회담은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열리지 못했다. 그럼에도 경제장관 회담 등 다른 장관급 회담은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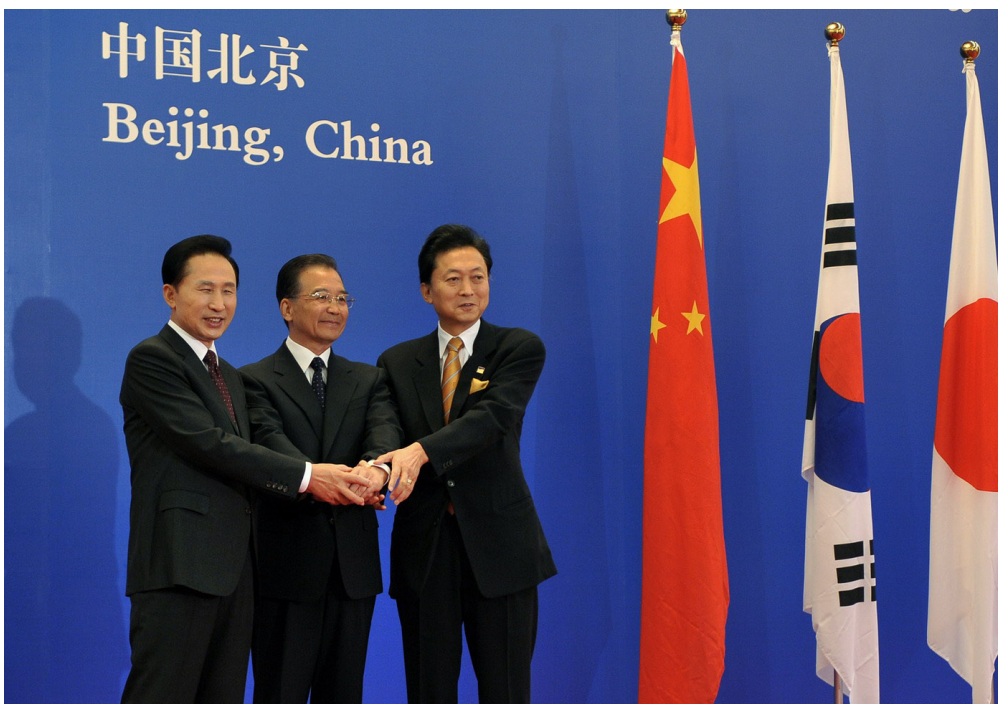
고이즈미 수상의 퇴진으로 2007년 한중일 정상회담이 재개되었고, 황사 문제 공동 대응, 에너지 전략 대화 구축, 한중일 무역투자협정 조기 체결 등에 합의했다. 그리고 비록 홈페이지 구축에 머물렀지만 ‘사

이버 사무국' 설치에 합의했고, ASEAN+3 정상회의 후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별개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여 한중일 정상회담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한중일 협력이 출범하고 정착하는 데는 한국의 역할이 컸다. 김대중 대통령은 아시아 외환 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많은 역할을 했으며 한중일 협력에 적극적이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동북아시아 균형자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미중 대립, 중일 대립 등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위기에 처했다는 인식 위에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한중일 협력을 중시했다.

3. 한중일 협력의 제도화(2008~2012년)

2008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1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기존의 한중일 정상회담과 차별화된다. ASEAN+3 정상회의와 별개로 개최되는 독립적인 정상회의를 축하하듯, 〈한중일 파트너십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을 통해 “개방성, 투명성, 상호 신뢰, 공통 이익 및 다양한 문화의 존중”이라는 협력 원칙을 공표했다. 세계적 금융 위기에 직면한 2008년의 상황에 맞춰, 한중일 경제금융 협력에 대한 강인한 결의를 표명하는 데 많은 논의를 할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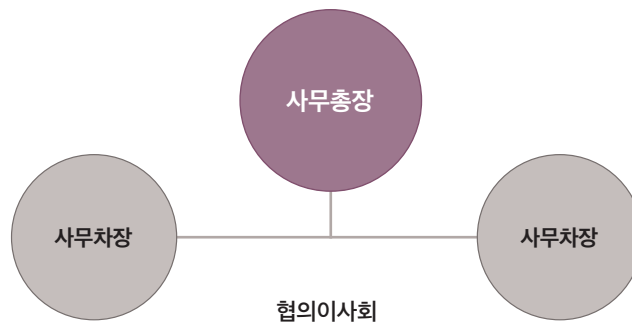


2009년 10월 2차 한중일 정상회의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스 CC BY-SA 2.0 © Korea.net)

2009년 10월 중국에서 개최된 2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정상회담 10주년을 기념하여 지금까지의 한중일 협력을 회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10주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국은 안전 보장 대화를 강화하여, 3국의 방위 담당자 또는 군 당국 간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한다”라고 선언하고 전통적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구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해상수색구조협정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었기에 전통적 안보는 미국과의 관계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었고, 주로 한미일 협력체제 내에서 논의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수상의 제안으로 한중일 대학 교류 구상이 채택되었다. 이 구상은 이후 ‘아시아 캠퍼스’로 명명되며 한중일 청소년 교류의 핵심 사업이 되었다.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사무국 설치가 합의되어 한중일 협력의 제도화 수준이 높아졌다. 실제로 2011년 9월 서울에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한중일 3국 협력 비전 2020>이 합의되어 향후 10년간의 한중일 협력 과제가 제시되었다.

한중일 3국 협력 비전 2020 (2010년 3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발표)	
협력 항목	협력 내용
3국 파트너십 조직화 및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회의, 장관급 회담 등 강화 - 사무국 설치 - 한중일 방재 담당 장관 각료회의 개최(자연재해 공동 대응) - 한중일 안보 협력 - 국제범죄 대처 및 3국 간 경찰 협력 강화 메커니즘 구축 - 자매도시 확대 등 지방 정부 교류 촉진
공동 번영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까지 한중일 FTA 공동 연구 완성, 장기적 경제 통합 추구 - 무역 환경 개선 - 물류 운수 시스템 구축 - 한중일 무역투자협정 조기 체결 - 금융 협력 등
지속 가능한 개발 및 환경보호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동 대응 - 환경 우선 협력 분야(10개) 공동행동계획 실시 - 황사 협력 등
인적·문화 교류 및 협력을 통한 우호 관계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교류, 문화 협력, 대학 교류 등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비핵화 - 대테러 협력, 마약 범죄 관련 협력, 전염병 대책,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대책 등



부서

정무	경제	사회문화	행정조정
-정치 -안보 -지역 이슈 -원자력 안전 -재난예방·관리 -싱크탱크 네트워크 -미디어	-경제&무역 -교통&물류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보전 -세관&표준화 -지적재산권&정보통신 -과학&기술 -농업&어업 -소비자 -산림 -수자원	-문화 -교육 -스포츠 -관광 -보건&복지 -인사 행정 -지방정부 교류 -청소년 교류	-인사 -재무&회계 -구매관리 -사무관리 -IT관리 -홈페이지&SNS -행정 -법률지원

교차기능팀

홍보	통계	청소년 교류	기획
----	----	--------	----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 조직도 (출처: TCS 공식홈페이지 <https://tcs-asia.org>)

2011년 도쿄에서 개최된 4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그해 3월의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원자력 안전 협력에 관한 합의 문서>를 채택하여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력, 평상시의 정보 교환 강화, 긴급 시의 의사소통, 원자력 문제를 협의하는 고위급 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또한 <방재 협력에 관한 합의 문서>를 채택하여 훈련 실시와 능력 향상, 재해 발생 시 원활한 의사소통 확보, 긴급 원조팀 파견 등의 원활화, 방재 기술 및 정보 공유 강화 등에 합의했다.

2012년 중국에서 개최된 5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협력 비전 2020>의 충실한 이행으로 한중일 해상수색구조협정 체결의 원칙적 합의, 사무국 설치, 한중일 투자협정 체결 등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중일 협력이 제도화되고 발전하는 데는 일본의 역할이 컸다.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수상에 이어, 정권 교체에 성공한 민주당 하토야마 수상은 ‘우애 외교’를 주창했다. 그는 “계속 패권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분투하는 미국과 패권 국가가 되고자 기도하는 중국의 틈에서 일본

은 어떻게 정치적,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지켜 나갈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활로를 동아시아 공동체에서 찾았으며, 그런 만큼 한중일 협력에 적극적이었다.

4. 한중일 협력의 정체기(2013년~현재)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 일본 민주당 정부의 몰락과 아베 정부의 등장은 한중일 협력에 위기를 초래했다. 아베 2기 내각의 등장으로 역사수정주의가 강화되면서 2012년 이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 갈등,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문제를 둘러싼 중일 간 영토 갈등 및 역사 갈등이 격화되었고 한중일 정상회의는 3년 동안 개최되지 못했다.

한일 간 ‘위안부’ 문제가 타결 국면에 접어들면서, 2015년 11월에 서울에서 6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올림픽,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등 3국 스포츠 교류 강화에 합의했다. 동시에 한중일 FTA와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의 조기 타결에 합의했다. 또한 <동북아 평화와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 성명에서 3국은 “3국 협력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공헌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3국 협력을 보다 제도화하여 촉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TCS)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무국도 장관급 회담에 참여하도록 했고, 3국 협력기금(Tilateral Cooperation Fund, TCF)을 만들어 3국 협력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등 한국 국내 정치의 불안정으로 인해 7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8년에야 재개되었다. 특히 북한과의 평화공존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전개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지지를 얻는 장으로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중시했다. 실제 2018년에 개최된 7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여 그해 4월의 <판문점 선언>을 지지했다.

2019년 중국에서 개최된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2010년에 발표했던 <한중일 3국 협력 비전 2020>을 대신할 <차기 10년을 향한 3국 협력 비전>을 발표하여 한중일 협력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2010년에 발표한 협력 비전과의 결정적 차이는 “3국 협력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여 3국 간 협력의 이익을 다른 국가 및 지역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한중일 + X’ 협력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시한 점이다. 당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고려하면, ‘X’가 북한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주장도 존재했다. 어찌 되었든, 한중일 협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차기 10년을 향한 3국 협력 비전 (2019년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발표)	
협력 항목	협력 내용
3국 협력 개선	- 정기적인 정상회의 개최의 중요성 - 사무국 능력 강화
지속적 평화와 안정 유지	- 정치적 신뢰 관계 강화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 납치 문제 해결
개방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 상호 협력 수준 제고 - 자유, 공정, 무차별 무역 및 투자 환경 실현 - WTO의 기능 개선 및 개혁 등
과학기술에 대한 변혁 주도	- 정보통신, 디지털 협력 강화 - 금융 불안정성에 대한 협력 강화 등
교통 물류 등 지역 연결성 및 인프라 협력 강화	- 연결성 강화, 인프라 협력 등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2030 어젠다' 지지	- 순환형 경제 관련 협력, 북극 협력 등 - 해양 쓰레기 등 협력 - 기후변동 협력
문화·인적 교류 분야의 협력	- 스포츠 협력, 관광 협력, 인적 교류 등
재활성화와 공통의 발전 달성	- 3국 협력의 깊이와 폭을 확대하여 3국 간 협력의 이익을 다른 국가 및 지역으로 확대 - '한중일 + X' 협력을 추구

5. 나가며: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한중일 협력

한중일 협력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한계로 인해 안보, 외교 등 민감한 영역에 대한 협력은 사실상 전개되지 못했다. 대신, 동북아 지역의 상호 의존성 증가에 따른 초국경 문제, 이틀테면 황사 등 환경 문제, 바다 쓰레기 문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문제, 재난 재해 문제 등 한중일의 공통 과제에 대한 구체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

2019년에 마지막으로 개최된 8차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현재까지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이었다. 사실 한중일은 2003년 사스 유행, 2007년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 등을 경험하며 보건 협력을 강화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직전인 2019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에서 방역 협력 강화, 공동 조사와 연구를 통한 감염병 원인 규

명, 백신 개발, 백신 수급 불안정에 대비한 신속한 상호 지원 체제 구축 등을 협의했다. 그 결과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 수립, 보건 위기 상황 발생 시 한중일 질병관리조직 기관장 간 직통 연락 체계 구축,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 등에 합의했다.

2019년 ‘감염병 대응에 관한 공동행동계획’ 수립 합의는 한중일이 공통의 경험 속에서 미래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이는 이전에 사스와 신종 인플루엔자 유행을 경험하면서 한중일이 초국경 문제에 있어 운명을 같이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중일 협력은 민감한 ‘상위 정치’ 문제보다는 ‘하위 정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운명이기에 오히려 시민 생활에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한중일 협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중 전략경쟁은 한중일 협력에 시련을 가져다주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에도 한중일 정상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대중(對中) 견제의 자세를 명확히 하며 한미일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좀 더 많은 에너지를 할애했기 때문이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일 협력은 안보 협력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였으며 경제, 사회, 과학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약속했다.

한중일 협력의 중요한 축은 경제·무역·금융 협력이었다. 2019년에 발표된 <차기 10년을 향한 3국 협력 비전>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변혁 주도’ 항목에서 한중일 과학기술 협력을 차기 방향으로 설정하기 까지 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정책을 디커플링(decoupling)에서 디리스크링(derisking)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심각한 경제 전쟁은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공급망 재편 등 경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또한 과학기술 영역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기술 패권 경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의 중요한 축이었던 경제 협력과 새롭게 추가된 과학기술 협력이 얼마만큼 현실성 있게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한미일 협력은 경제 영역과 과학기술 영역으로 협력의 폭을 넓혔는데, 한중일 협력은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이 글은 집필자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의 공식 입장과 무관합니다.

| 최희식 |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전공은 한일관계, 일본 정치외교이다. 대표 저서로 『전후 한일관계 70년: 우리는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 왔나』(선인, 2016), 『日韓關係史 1965-2015 | 政治』(東京大学出版会, 2015, 공저), 『동아시아 세력전이와 일본 대외전략의 변화』(동아시아재단, 2014, 공저) 등이 있다.

『동북아역사리포트』 지난 호는 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창간호** 보존과 철거의 갈림길: 일제 인천육군조병창 유적의 현대사
- 제2호** 시진핑 시기 험한이 고조된 원인은 무엇일까
- 제3호** 남중국해 분쟁의 역사와 현황
- 제4호** 중국 역사교과서에 나타난 역사 공정의 변화 -신간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속 한국과 동북아-
- 제5호** 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침략전쟁과 강제동원의 그림자
- 제6호** 중국이 주장하는 '문화원조'의 배경과 문제점
- 제7호** 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8호**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 제9호** '종번(宗藩)' 해석과 중국 대외관계 인식
- 제10호** 서양 고지도로 확인한 우리땅 독도와 동해 표기
- 제11호** 일본의 사도광산 등재에 따른 대응 방안
- 제12호** (영문판)미쓰비시(三菱) 사도(佐渡)광산: 완전한 역사(Full History)와 보편적 인권 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현장
- 제13호** 일본 언론에 공개된 '독도 사료'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제14호** 2022년 검정통과 일본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분석
- 제15호** 경찰 자료로 보는 램지어의 '태평양 전쟁의 성격' 비판
- 제16호** 중국 학계의 발해사 연구의 동인(動因)과 쟁점
- 제17호** 중국인에게 한국전쟁은 어떻게 기억되어 왔는가
- 제18호** 1947년 미 군정장관, 독도 출장을 허가하다
- 제19호** 역사문제와 한일관계 -일본은 사죄하고 반성했는가-
- 제20호** 2022년 일본 참의원 선거와 한일관계 전망
- 제21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결의 과제
- 제22호** 광복 77주년, 한일관계의 회고와 전망
- 제23호** 한국-중국 수교에 가려진 한국-중화민국 단교 30년
- 제24호**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을 기억하자
- 제25호** 동북공정 20년, 현황과 과제
- 제26호** 중국에서 사라지는 우리 고대사
- 제27호** 한국과 베트남 관계 30년을 되돌아본다
- 제28호** (영문판)약속 이행을 촉구받는 일본 메이지산업유산
- 제29호** 중국 장성(長城)이 한반도 서북부지역까지 들어왔다고
- 제30호** 연·진·한 장성은 요동지역에 있었을까
- 제31호** 우리 역사 속의 러시아를 생각하며
- 제32호** 중국의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세적 문화 주장
- 제33호** 독일-프랑스 역사 화해의 회고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래
- 제34호** 일본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에서 사라진 '강제(forced)'
- 제35호** 일본제국 전쟁사에 비추어본 21세기 일본의 안보전략 평가
- 제36호** 시진핑 3기와 천하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갈등
- 제37호**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기원과 전개 과정
- 제38호** 음식도 발효를, 생각도 발효를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
- 제39호** 돌궐사의 시각에서 바라본 중국 대외관계사
- 제40호**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과 한국인원폭희생자위령비
- 제41호** 2023년 검정 통과 일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분석
- 제42호** 독일과 폴란드의 역사 화해를 위한 공동 교과서 프로젝트
- 제43호** 고구려의 대당방어체제(對唐防禦體制)와 645년 전쟁
- 제44호** 한국인의 여름 나기, 삼계탕의 연원과 발달
- 제45호** 베트남 역사와 대중(對中) 관계
- 제46호**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기억과 한중일 삼국
- 제47호** 몽골 지폐 도안에 담긴 역사와 국가 정체성
- 제48호** 16세기 한중 관계와 예의지교(禮義之交)
- 제49호** 관동대지진 100주년 -관청 기록의 봉인과 '민중 폭력'의 재검증
- 제50호**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기억 -1920년대 한중 관계의 역사 속에서 상호협력(互助)의 교훈을 찾는다
- 제51호**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제정 배경 토틀아 읽기
- 제52호** 중국의 백두산 문화 유적 및 내러티브에 대한 중국화 시도
- 제53호** 근현대 중국의 종주권 개념 변용과 한중관계 인식
- 제54호** 국서(國書)를 통해 본 조선과 후금의 국교
- 제55호** The Franco-German Historical Reconciliation and Its Lessons for Northeast Asia's Future